

## 일자리

발제문- 일자리에 대한 공약은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 등 모든 선거의 화두입니다. 그에 비해 실제로 일자리 상황이 호전됐다거나 좋은 상태로 평가받는 적은 없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란 일터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하는 첫 단추입니다. 시작이 너무 어려워진 실정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선거 때마다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왔으나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왜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대선은 청년 인생의 반이 달린 일자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청년의 시작’은 어떤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재명	<p>일자리 6대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만개 이상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li> </ul> </li> <li>●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개편</li> <li>- 기후대응기금 확충</li> </ul> </li> <li>● 청년 고용률 5%p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단계적 상향(정원 내 3%→5%)</li> <li>-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2배 증액</li> <li>- 정부-지방정부-기업 간 협력해 청년요구와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모델 개발</li> </ul> </li> <li>● 일자리전환기본법(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 상호보완)</li> <li>●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콘기업, 중소기업의 성장에 집중</li> </ul> </li> <li>● 혁신형 지역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시 2.0프로젝트’</li> <li>- 지역 노동자 정주 여건 마련</li> <li>-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li> </ul> </li> </ul>
윤석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오창, 대덕, 세종, 익산 등 중원벨트 중심으로 융합산업 분야 연구 개발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 육성</li> </ul> </li> <li>●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세대: 대학 창업 기지화 / 3040세대: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확산 및 사내 벤처 활성화 / 4050세대: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li> </ul> </li> <li>● 노조 고용세습 및 간부 취업 비리 차단하여 기회 불균형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혜 채용규정’ 포함된 단체협약 무효화 추진, 채용 장사 적발 시 형사처벌 등</li> </ul> </li> <li>●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지원 혜택: 중견기업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li> </ul> </li> </ul>
심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노믹스’로 전국 일자리 150만 개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일자리 50만+‘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로 사회적 일자리 100만</li> <li>● 학력 차별금지법</li> <li>● 사회진출 경력 제공 위한 긴급 청년 일자리 10 만 개 마련</li> <li>- 전국단위로 확대 및 임금 수준 상향</li> <li>● ‘일자리 보장제’ 중 30만 개는 청년 일자리로 보장</li> <li>● ‘일자리 전환 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li> </ul>
안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인재 30만 명 양성</li> <li>●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으로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li> </ul>

## 개인 의견

### 이재명 후보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및 기업 이전 정책은 모든 청년이 스타트업의 ceo로 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 성장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보인다. 지방에 ‘일자리’ 자체를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전해 기업이 지역에서 자생하면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구조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기업의 역할을 앞세웠는데, 이는 1회성에 그치는 일자리 창출 계획에 비해 지속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업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유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는 않아 아쉽다.

### 윤석열 후보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세대를 나눠서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계층에 대한 세분화가 부족해 보인다. 같은 세대라도 처한 상황은 세대의 다양성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다.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을 너무 납작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었다. 예를 들어, 2030세대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다. 세대보단 경제적 상황, 대학 진학 유무 등이 일자리 정책에 더 반영되어 했을 조건이라는 생각도 든다. 2030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창업 기지화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대학생 중에서도 창업에 뛰어들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대학생하면 창업이다’라는 단순한 접근으로 만들어진 공약으로 보인다.

### 심상정 후보

기후위기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노믹스’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공약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할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사회의 필요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안철수 후보

본인이 과학계를 잘 알고 있다는 근거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30만 명을 양성해 일자리까지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없어 보인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한 것은 일자리 정책에서 공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